

ILO 핵심협약 비준 문재인 기만에 속지 말고 대정부 투쟁!



김민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12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4면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6~7면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9면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11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유예, 실존적 위기에 빠진 보수당

프랑스 급진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훌륭한 소설 《유예》는 1938년 9월 뮌헨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사르트르는, 뮌헨회담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 1년 미뤄졌을 뿐 위기 자체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음을 그렸다.

4월 10일 유럽연합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예정일을 할로윈 [10월 31일]까지 미룬 것도 같은 종류의 '유예'다. 물론 이번이 1938년보다 판돈이 적고, [파시즘과 결합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경쟁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1938년에 견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세력 관계는 여전히 유럽연합에 유리한데, 유럽연합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에게 더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영국 하원에 넘어갔다. 그런데 영국 하원은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자, 강경 유럽연합 잔류파로 분열해 마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어느 쪽도 다수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이 보수당과 노동당에 똑같이 위기라는 식의 어설픈 논평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테리사 메이네 제 손으로 보수당을 브렉시트 정당으로 자리매김시켰고, 상황이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갖은 술책을 부렸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관계를 단절해서 영국 경제가 치를 대가 때문에 영국 대기업들이 격분하자, 메이는 한 발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도 반영돼 있던 그런 후퇴의 효과에 만족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수당 내 [유럽연합 탈퇴파와 잔류파] 두 파벌 모두 메이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의회 내 다수를 잡지 못한 메이는 오도기도 못하는 처지다.

여론의 분위기도 비슷한 듯하다.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보수당 위기에서 [충분히] 득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은 유럽연합 잔류파의 단골 소재가 됐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유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국은 곧 [5월 23일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탈당

메이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우야 뻔하다. 그 선거에서 보수당은 참패할 듯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업 오피니움리서치는 4월 14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을 17퍼센트로 집계했다. 같은 조사에서 극우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보수당을 맹추격해 지지율 13퍼센트를 기록했고, 영국독립당 전 대표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신당도 지지율이 12퍼센트나 나왔는데 말이다.



웃어도 웃는 게 아냐 4월 9일 파리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을 만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노동당 지지율은 29퍼센트를 기록했다. 노동당 우파 의원들이 탈당해 만든 '독립 그룹'(이제는 '체인지 UK'라고 불린다)과 녹색당에 지지층을 뺏겼는데도 말이다.

유럽의회 선거 때문에 교착 상태 해소가 더 어려워질 듯하다. [메이가] 노동당과 타협한다면 그 타협에는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가 포함될 텐데, 여기에는 보수당 의원 약 170명과 내각 성원 약 10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층이 오른쪽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일체를 거부하는 보수당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메이가 코빈과 협상하는 것을 환영한 보수당 내 브렉시트 지지파 일부가 야단법석을 부

리고 있지만, 이런 자들은 극소수다.

메이를 보수당 전 총리 로버트 필과 비교해 보면 메이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두드러진다. 필은 1845~46년에 소속 정당 보수당의 보호무역주의 전통을 거슬러 [곡물 수입을 규제하는] 곡물법을 폐지했다. 필은 내각 성원 중에서도 소수파였기 때문에 야당 휘그당의 도움을 받고서야 곡물법 폐지를 단행할 수 있었다.

필 지지자들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 휘그당과 동맹을 맺으면서, 보수당은 분열했다. 당시 유명한 필 지지파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필 지지파와 휘그당을 묶어 자유당을 창당했다. 보수당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서야 다수당이 돼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필 지지파와 달리] 메이 지지파가 부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메이 내각에서 가장 주도적인 유럽연합 잔류파인 고용·연금장관 엠버 리더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작 3퍼센트 지지율을 기록했다. 영국 친기업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더가 "킹메이커 구실을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보리스 존슨 같은 유럽연합 탈퇴파 인사들이 리더의 지지를 얻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말이다.

메이에게는 보수당 당론을 거슬러 [코빈과의] 타협을 강제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 세력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누가 더 강경한 유럽연합 탈퇴파인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 매몰돼 있느냐 보수당은 영국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듯하다.

둘째, 영국이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할로윈이 다가오면, 유럽연합은 메이에게든 (누가 됐든) 그 후임자에게든 다시 한 번 유예를 주기 꺼려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50호 / 번역 김준호

Q 물어설령

뮌헨 위기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병합하겠다고 나서 위기가 고조됐다. 결국 1938년 9월 뮌헨회담에서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가 협정을 체결했고, 히틀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듬해 제2차세계대전 발발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청호나이스 노동자 첫 전면파업, 삭감 임금 중 월 30만 원 회복

정수기 등 생활가전 업체 청호나이스의 설치·수리 노동자들(민주노동서비스연맹 청호나이스노조)이 파업 열흘 만에 임금 인상과 유류비, 식대 등을 쟁취했다.

지난해 청호나이스는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제 정규직"이라는 사측의 말과 달리, 자회사 전환 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됐다.

월평균 490만 원 받던 임금이 190만~235만 원까지 떨어졌다. 160건 이상 처리하면 건당 7천 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노동자들의 전국 평균 처리 건수는 172건 정도다. 사실상 임금이 반토막 난 것이다.

게다가 차량 기름값(유류비), 식대도 지원받지 못했다. 기본급이 200만 원 가량인데, 유류비가 70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3월 28일 청호나이스노조 파업 결의대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에게 제품 영업 압박도 가해져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제품 판매 일일 목표를 주고 어떻게든 강매를 시켰다. 판매하지 못하면 밤까지 퇴근할 수도 없었다.

이런 열악한 처지에 울분이 쌓여 온 노동자들은 3월 21~22일 연차 파업 후,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노동자 900명 중 조합원 800명 가량이 파업에 나섰다. 전 조합원의 94퍼센트가 이탈 없이 파업에 동참할 정도로 분노가 높았다.

처음에 사측은 1인당 3만 원가량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턱없이 부족한 안을 내놨다. 그러나 파업 효과가 나기 시작하자 사측은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도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파업 첫날 AS가 4500건이 발생했는데, 1500건 밖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비조직원, 사업처장(관리자), 본사 정규직이 모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파업 기간 동안 AS(수리)는 2만 건가량이 밀렸어요. 처음에는 AS 방문 날짜를 미루는 것으로 대응했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품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게 사측에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 결과, 160건 기준 30만 원가량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고, 유류비 10만 원, 식대 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첫 파업으로 소중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도천 위원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

"160건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급을 올리고 호봉제를 제대로 도입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문

제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다리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벽을 뚫다가 함매(해머드렙)가 돌아가서 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측은 안전 문제에선 마스크 하나 지급하는 게 다입니다."

청호나이스 노동자뿐 아니라 동종 업계인 SK매직 노동자들이 먼저 노조를 만들었고, 얼마 전 코웨이에서도 수리설치를 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 필증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도천 위원장은 투쟁에 나선 수리·설치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수리·설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 등으로 노예 같은 회사 생활을 해 왔어요. 앞으로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으로는 어렵죠. 함께하면 이 업계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양효영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일부 개선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사용자 대항권”이라며 앞장서서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제한 같은 개악안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우익적인 그들은 정부가 노동자 측만 대변했다고 강변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요구를 다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담은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계도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나타낸다.

ILO 핵심협약은 한국이 1991년 ILO 가입 때 진척에 비준하고 국내 법에 반영했어야 했던 것들이다. 정

부는 비준을 피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정부·사용자와 싸우면서 조직을 키우고 투쟁할 권리를 법 테두리 안에서 확장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노동자 표를 얻으려고 전교조 인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약속했다.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논리는 이처럼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면서, 노동자 스스로 얻어낸 권리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공익위원들이 이 논리를 수용한 것은 경총의 낱감도 논리를 사실상 따른 것이다. 단순히 상호간 권리의 맞교환이 아니다.

애초에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기본권 보장 요구를 문재인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고 간 것부터 문제였다. 어차피 양보해야 할 것을 이용해 사회적 대화라는 형식으로 뭔가를 받아내 보려는 술책이었다. 이렇게 ILO 핵심협약은 사용자들의 볼모가 됐다.

탈핵 공약을 지키라니까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자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과 똑같다. 결국 이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이 탈핵 공약 폐기에도 사회적 대화가 이용된 것이다.

당시에 공론화위원회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엔지오들은 낭패

를 겪었고, 공약 파기에 항의하지도 못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사노위로 끌고 간 것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가증스런 위선

문재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끌었다. 막상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문제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끌고 갔었다. 그 결과가 노동계 악인 것이다. 거의 사기꾼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그동안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의 선(先) 비준’ 요구를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지금 문재인은 ILO 100주년 총회에서 연설할 명분(실질 개선이 아니라)을 만들고 싶어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위선을 폭로하고 싸우려고 한다.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비준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은 동의 자체로 기존 법을 대체하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실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ILO 협약 선비준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경사노위 논의를 활용 가능하다고 여기거나 선입법 논의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가령 민주노총 교육원이 낸 2018년 10월 교육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전략적 활용”을 하자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선비준-후입법 논리가 타당하다. 단,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전제조건에 관한 입법은 비준 전 연내 완료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폄하했다.

이렇게 정부의 시간 끌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실전을 해 온 것이 정부가 개악으로 가는 길을 더 편하게 해 준 면이 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단호한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에 안(사실상 정부 개악안)뿐 아니라,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요구를 적극 반영한 자한당 추경호의 안이 올라와 있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익위원 안은 경총의 사용자 대항권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 안이 따로 없어도 한정에 안과 추경호 안을 하나로 병합해 개악안 심의

를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 논의를 시작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가 4월 안에 두어 차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추가 개악 등도 이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 두 사용자 계급정당은 5월 초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것들을 통과시키려 할 것 같다.

자한당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는 안을 내면서 문재인 정부를 얼토당토않게 친노동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의 효과는 문재인 정부가 더욱 친사용자 행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온건파의 자충수로 노동운동이 자한당만 규탄해서는 부족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추가 개악, 노조법 개악 등에 맞선 투쟁을 만만찮게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열릴 올해 노동절 집회는 지역 분산이 아니라 서울로 집중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이 정치적 상징 면에서 일관성 있다. 이런 노동절 행진은 이후 활발한 노동쟁의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인의 기선 잡기

김문성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 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 법안을 다루면서 국회는 노동자들의 항변조차 듣지 않으려 했다. 그런 국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찰청은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자·서민을 위해서는 하는 일도 없는 국회에 항의한 것이 질서 파괴 행위라는 것이다.

국회 경비를 맡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명 규모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지난해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에서 선거사범 총력 단속 수사전담반을 꾸릴 때 서울경찰청의 수사전담반 총원이(서울청 요원과 경찰서 31곳 차출 인원을 모두 더해) 340명 규모였다. 민주노총 수사전담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지능

범죄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한 것은 온라인 사찰까지 해서 인적 사항을 살살이 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12일 경찰은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대학생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자한당 정치인들의 반동적 발언을 규탄하는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검찰은 이튿날 바로 2명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행히도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말이다.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을 짐작케 한다. 국회에서 여당과 자한당이 극한 대치를 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기에 노동개악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추가 개악, 단체행동권 약화시킬 노동조합법 개악 등. 자한당은 이조차 성에 차지 않아 하면서 더 나쁜 개악안을 내놓고 자기들이 진정한 사용자 대변 정당임을 과시한다.

따라서 국회 법안 협상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자한당이 개악안을 내릴수록 사용자들의 지지를 잃을까 봐 문재인과 민주당도 더 개악에 매달릴 것이고, 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중도파 정부

가 우파와 노동자 양쪽에서 압박받으며 쪼그라드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강경 대응도 정부가 노조에 물렁하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는 조금씩 높아져 왔다. 노동운동이 박근혜 퇴진에 기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기도 괜찮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진보 개혁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들이 지금 문재인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쓰라린 냉소와 좌절보다는 항의와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3월 말과 4월 초 국회 진입 저지 투쟁 직후 민주당과 자한당이 합의에 실패해 노동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그 직후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투쟁 결의 자리로 치러진 한 가지 이유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가가 물 건너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 수정은 안의 원대회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종로 도심에서 위력 있는 집회를 열었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가 수도에서 대규모로 열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인다면 정부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면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탄압에 앞장



마녀사냥 말라 노동자들의 대국회 항의는 정당하다

선 것은 올 상반기 노·정 충돌 국면을 앞두고 민주노총에게 보내는 강력한 사전 경고인 것이다. 물론 우파 눈치 보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주노총 간부나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을 보면, 경찰은 주로 자민통계 활동가들에게 엄격하게 구는 듯하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의 내용이 마녀사냥으로 보이기도 한다. 혹시 모를 남북관계 경색 조짐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이간시키고, 다른 진보적 사회세력으로부터 민주노총을 고립시킬 수 있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교롭게도 경찰 압수수색 이틀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북·미 대화가 틀어져 제재 완화와 화해·협력보다는 다시 긴장이 고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위선(어설픈게 중재자를 자처하지만 한미동맹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만일 북·미 갈등 재격화 속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보진영 내 반미 자주화 운동 세력

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한 우파의 단속 압력도 커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 변화 가능성에 발빠르게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대중적 노동자 운동의 부상 이후 정치체제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로 점차 변모해 오면서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가보안법도 결코 폐지되지 않는 것은 이런 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만성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 집회부터 본격화될 5~6월 노·정 충돌 국면에서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을 포섭하는 것도 계속하지만, 탄압도 카드(이간·고립의 마녀사냥 책략)로 삼을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촛불 개혁 염원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요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택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로 우파도 약화시키고 개혁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온건파들의 셈법은 거둢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김민준/한국노동자연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낙태제한과 차별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최미진

지난주 현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여부와 낙태 합법화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낙태권 운동이 중단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이미 논쟁은 시작됐다. 우선,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는 보수 진영의 압박이 시작됐다. 현재 판결 직후 천주교주교회의는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낙태 고발 캠페인을 벌였던 프롤라이프 의사회장 차희제 등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비웨이블브와 노동자연대는 처음부터 낙태 전면 합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페’)도 현재 판결 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권리를 요구했다.

가톨릭교회와 보수·우파들은 이번 현재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현재 판결이 원칙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구체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현재 결정의 구체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현재 결정의 의미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현행법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 기간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명백히 한계도 있다. 태아 생명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어,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는 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약의 범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후기 낙태 허용 여부나 그 조건 문제에서는 모호하게 열려 있다.(따라서 이 부분은 낙태권 운동이 투쟁으로써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 전면 금지 기준으로 정한 24주보다 오히려 더 당긴 측면도 있다.

현재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런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결정문에 따르면 낙태 사유와 기간에 따른 제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만 손보는 꿈수도 가능하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옹호했다. 그들은 임

신 14주까지의 낙태는 사유 제한 없이 여성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조차 기간에 따른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 온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현재 결정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 것(즉, 전면 합법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은 확대 해석이다. 현재 결정의 한계와 공백, 또 이를 보수 우파들이 이용할 가능성을 정확히 직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향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서 더 도움될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과 자유한국당, 민주당 등은 현재 판결의 허점을 이용해 낙태 허용 범위를 제한하려 들 수 있다.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역임한 남윤인신 민주당 의원은 현재 판결 직후 이렇게 밝혔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을 조화롭게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겠다.” 이런 절충적 시도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운 안을 도출할 공산이 크다.

정의당 안(案) 논쟁

현재 판결 직후 정의당 안이 맨 먼저 발의됐다. 그러나 정의당 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낙태권 운동 내에서 진행 중이다. 정의당 안이 현재 판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의 대부분을 금지한 현행법보다는 낫다. 이 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자보건법 개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절은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고, 14~22주 임신중절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허용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기간·사유 제한과 허용 사유 범위 밖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의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을 남겨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정의당 당의 기본 취지와 모순을 빚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최근 급성장했고, 보수적인 현재조차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이번 정의당 안의 골자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직후 거론됐을 때 이미 그 한계를 염려한 바 있다.(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공격에 맞서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 추진을 옹호하면서 그렇게 했다.)

특히, 기간과 사유의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적했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허용 범위 밖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모자보건법에 두면 그것은 낙태죄를 실제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여성이 아닌 의사에 대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낙태 시술을 위촉시켜 여성을 위협과 고통에 빠뜨리기는 마찬가지라는 점도 지적했다.

낙태권 운동 내에서 이런 우려와 비판이 있었는데도 정의당이 결국 법안에서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제약하고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남긴 것은 크게 아쉽다.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낙태약 합법화가 빠진 것도 아쉽다.

정의당은 사실상 이번 현재 결정이 가리키는 수준에 맞춰 개정안을 낸 듯하다. 개신교 우파와 가톨릭 교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법안 발의에 동참시킬 만한 타협 수준 등도 고려한 나름의 고충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낙태 제한과 도로 처벌이라면 낙태권 운동 지지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모낙페’와 민주노총 등의 정의당 반대 성명은 그런 우려의 표현일 것이다. 정의당은 낙태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합하도록 재고해야만 한다.

상류층이 아닌 보통의 여성에게는 이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 임신 주수와 사유 제한 없이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물론, 의사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여성의 선택을 좌절시키는 독소 조항들도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낙태를 보조해 줄 조처들이 도입돼야 한다. 경제적 부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적용해, 낙태 수술과 낙태약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앞으로 우파들은 물론 민주당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낙태권 운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옹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모낙페’가 밝힌 것처럼, “어떻게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절차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더욱 보강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 내 세력관계를 고려한다면 아래로부터의 낙태권 운동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 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병원 이용과 공상 처리 등에서 '외부인' 취급하는 차별도 서럽다. 특히 문제인의 '희망고문' 때문에 더 힘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의 경우 일부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이름만 정규직화'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또 다른 용역업체에 불리한 '자회사' 고용 방안을 내놓아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장 서창석의 자회사 방안에 반대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식당·장례식장 등 외주 위탁의 경우 아예 자체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 사실상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손을 놓은 상태다.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방침 공개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장들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 이들이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며 전환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노동자들은 6개월짜리 고용 계약을 거듭 갱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규직화는커녕 "언제 또 잘리지 않나 피가 마르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자기가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공약만 해 놓고 대통령 돼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공문 한 장만 내려보내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부산대병원은 적자 때문에 정규직화가 어렵다더니 8800만 원이나 들여 '자회사'로 할지 말지 컨설팅을 한대요. 그 돈 우리나라 주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보건의료노조 허경순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장)

현재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여러 상급 노조들로 나뉘어 조직돼 있다. 부산대병원을 포함해 7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5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월 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노동자들

에 소속돼 있다.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등 일부 노동자들은 공공연대노조와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돼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 노조가 없는 기업노조다.

정부와 병원장들은 이런 조건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이를 통해 전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한 것이다.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이를 일부 막아내기도 했지만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급 단체의 경계를 뛰어넘는 단결에 대한 바람이 적지 않다. 이번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에서 노동조합들이 이례적으로 공동투쟁에 나서게 된 데에는 이런 기층의 바람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지부장들끼리 모여 얘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차피 한 식구잖아요. 서울대병원 투쟁이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또 우리 투쟁이 서울[대병원 투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허경순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지부장)

"병원장들은 다 같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우리 노동조합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연대본부 측에 공동투쟁을 제안한 거예요."(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의료연대본부 측이 이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민주일반연맹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 투쟁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이 회의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5월 병원 로비 농성, 파업 등 공동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한 식구

이런 단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집행부가 정부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조합 안팎에서 크게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논쟁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연대본부 등에 공동투쟁을 제안한 것도 이런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니만큼 더 큰 힘이 보태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정 등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지지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이 보여 주듯이 대중의 공공의료 지지가 높은 지금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한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노동자 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 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_____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휴대전화번호 _____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 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메일 _____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주소 (시/군/구까지) _____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사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토론회, 집회, 세월호 영화 <생일> 시사회에 참석하시는 등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건 진실을 규명해서 그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을 은폐하는지, 서민들이 왜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정치인을 뽑은 건데, 왜 기업가들의 돈에 의해서 그 정치가 좌우되는 건지, 왜 기업가들의 말만 들어주는 건지, 대통령께서도 [용균이] 사고 나고 올해 초에 기업가들만 불발더라고요. 왜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기업가들만 불러서 얘기를 듣는지, 우리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할 때, 국무총리 계신 곳에서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쉽게 내 주려고 하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죽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싸워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처럼 우리를 바로 취급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억울해요.

3월 4일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식을 접하고 어떠셨나요?

처음에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나마 같이 일하던 동료가 풀코드(비상 정치 장치)를 당겨서 살릴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도 용균이가 2인 1조 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 살았구나. 정말 불행한 일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사뭇 살았다는 마음에 감격스럽더라고요.

'용균아, 우리 그래도 벌써 한 사람 살았어. 이 일을 잘 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시발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안전 사회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이! 죽었어도, 내가 또 죽는다면 해도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었지만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우리 아들 죽인 사람들,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일간 국회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많이 후퇴된 법안이었어요. [기업 처벌의]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을 왜 두죠? 그냥 하한선을 높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법이더라고요.

최 지은 사람들은 기업가들이고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들 데 뺀다고 가려고 [해요]. 정말 잘못된 나라고 생각해요. 서민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당해야 하는지, 돈 없는 죄, 그게 무슨 죄예요. [기업가·정치인들이] 너희는 짓밟혀도 된다. 너희는 일회용이다' 하고 생각하지 못 하게 해야 해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찢어져 죽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우리 아들만 당한 게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고 의해서 짓밟히고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기업가들, 정치인들 다 어디 구멍이 집어 넣고 물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나라가 잘 사는 것 원치 않아요. 서민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안전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부터 인정해 줘야 해요.

가만히 책상 위에서 펜대만 굴리고 현장 확인도 안 하는 정부 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더 평평거리고 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데, 그래도 내가 시도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월 5일 김용균 씨 사망 대책 협의가 이뤄졌지만 4월 3일에도 김용균 특별노동안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만 급해요.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은 불리하니 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사 대상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어요]. [원청인] 서부발전이나 나라국거나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서 대응하느라 진상규명위원회 [출발]이 좀 늦어졌어요. 마음이 급해요.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빨리'를 원하는 거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왜 가진 자들은 죄 짓고도 벌을 안 받나요? 부통령님!”

최근 양승조 총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고 나서 다치고 죽어 아픈 잠깐 바라볼 뿐이고 사고는 자꾸 반복돼요.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고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이익이니까요.

정말 부당해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기업은 술수 써서 다 빠져 나가고, 실행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그 사람들이 벌을 저질러도 벌을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벌금만 내는지 모르겠어요.

태안화력이 그동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 노동자를 12명이나 발전이나 나라국거나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서 대응하느라 진상규명위원회 [출발]이 좀 늦어졌어요. 마음이 급해요.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빨리'를 원하는 거죠.

노력할 테니까요.

저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식들, 후손들도 우리에게 의해서 좋게 사는 것,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시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비정규직이라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처지[를] 개선하고 싶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인간 이하 취급받고는 못 살겠으니가 대통령 만나자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업들이] 안전 대책을 세우고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안 죽이려고

큰 목소리를 내야만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함께 밀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월호 운동이 대통령[을] 바꾸는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통령을 바꾸더라도 그 후속 대책에 우리 서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계속 싸웠잖아요. 황상기 어르신(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아버지), (제주도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아버지 등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불의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우리 용균이도 한 목소리 냈기 때문에 헛된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등 연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우리 유가족들이나 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뿔뿔히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싸워 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연대해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국개)는 우리가 손 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를 옥죄고 들어와요.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딜 가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못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씨 사고를 보면서 도대체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일처리가 어떻게 추모 집회에도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 청년·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찾아야 하고, 안전 교육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사회에 나가면 본인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사고가 나와 '야, 여기가 위험한 곳이구나' 한다고 용균이 동료들이 말하더라고요.

원래는 2인 1조로 일하면서, 점검할 때는 기계를 멈추고 점검이 끝나면 컨베이어 벨트에 연락해서 다시 돌리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는 애초에 멈추지 않게 생상하기 위한 거라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생선이 멈추는 거니까. 그게 사업주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에요.

보통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저절로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안전 장치를 풀어 놓고 일을 해요. 기계 돌리는 게 지시 과제인 공장에선 [기계 멈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도 하고, '나 여기 위험해서 못 하겠다' 해도 하고 안 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옆에서 누가 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절대 못 바뀔' 하는 생각으로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해요. 그래야 사회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정리 신정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나홀로 야간 근무, 컨베이어 벨트, 비정규직, 그리고 20대의 죽음, 고(故) 김용균 씨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4월 3일 한솔제지 정형 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서도 이 단어들은 고스란히 반복됐다. 희생된 노동자는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28세 청년이었다. 이 노동자는 전원이 커진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설비를 점검하다가 갑자기 작동한 대형 무시 원반에 끼여 무참한 모습으로 사망했다. 도대체 김용균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그로부터 4일 전인 3월 30일 인천의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소속 41세 노동자가 변압기 점검 중 감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조합민주노총 인천지부 캐스코(지회) 노안부장이기도 했던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을 남긴 채 세상을 등져야 했다.

이렇게 3월 한 달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만 23명이다(노동건강연대 집계)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처럼 끔찍한 산재재해는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과 과제에 대해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사진)를 만나 들었다. 이상윤 대표는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김용균 씨 사망에 이르게 했던 컨베이어 벨트 설비 사고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나요?

기계를 늘 관리하고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오작동도 있고 녹슬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설비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2인 1조로 일하면서, 점검할 때는 기계를 멈추고 점검이 끝나면 컨베이어 벨트에 연락해서 다시 돌리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는 애초에 멈추지 않게 생상하기 위한 거라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생선이 멈추는 거니까. 그게 사업주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에요.

보통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저절로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안전 장치를 풀어 놓고 일을 해요. 기계 돌리는 게 지시 과제인 공장에선 [기계 멈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요.

한솔제지 사고를 보면 김용균이 떠오르는데 얘기가 많습니다.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안법으로 산재가 줄어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외주업체와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김용균 사고' 핀박이 4월 3일 발생한 한솔제지 정형 공장 사고 현장



외주화와 산재재해는 어떤 측면에서 연관돼 있나요?

첫째, 위험 작업 자체를 외주화한다는 겁니다. 직고용 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하면 [원청이]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외주화하면 비용도 싸고 책임도 안 질 수 있어요.

법에 따르면 위험 작업을 외주화더라도 원청이 안전이나 노동자 건강 관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몰라라 해요. 애초에 그러려고 외주화를 한 거니까요.

둘째,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외주업체는 영세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윤율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 시간도 길고 더 빨리 일해야 해요.

셋째,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같은 현장에 여러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기계 멈춰 주세요", "다시 켜 주세요" 이런 소통이 잘 돼야 하는 데 안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외주업체 노동자는 보고를 하더라도 자기 업체 관리자까지만 연락이 가고, 그 관리자가 원청 업체에 또 얘기를 해 줘야 해요. 바로 연락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 불법이 되니까. 그런 이중, 삼중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 보가 왜곡되거나 [컨트롤 타워까지] 올라가지 않기도 해요.

넷째, 하청·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재계약(해고) 압박도 있고, 노동조합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를 관철시킬 자원이나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면 필연적으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산재 사망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사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 변동입니다. 기기가

좋아지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하면 사망자 수가 줄어요. 업무량이나 물량이 줄어서 일 자체가 줄어들니까요. 정부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산안법을 개정하고 외주화하면 비용도 싸고 책임도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현 정부는 산재를 이력저런 기술적 조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재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경제를 돌리는 어떤 큰 원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하는 한편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곤 말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사람 죽이는 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 만들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안전도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자아분열적인 행태고, 의도적인 거라면 이중 플레이죠.

산재를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산안법을 진정된 의미에서 '김용균 법'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놓고 벌여질 싸움도 예고되고 있어요. 이것이 일차적인 과제고요, 나아가서는 '기업 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중요한 요구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도록 만드는 것, 정부가 양심의 근대로 감독에 나서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들이 알아서 지키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구조, 현장을 노동자들이 결정하고 바뀔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강동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월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내몰리고 있다. 그들의 가족 수십만 명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

이미 지난 4년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혹독한 희생을 강요받았다. 일자리 수만 개가 줄었고, 임금 삭감, 복지 후퇴, 노동강도 강화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업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 측에 있다. 그들은 맹목적인 이윤 추구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더욱 키워 왔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우조선 같은 조선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진출을 독려했지만 이는 더 큰 부채가 돼서 돌아왔다. 따라서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와 거제시, 민주당 등은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고용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매각'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매각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 고용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말이다.



최 없는 노동자가 왜 희생돼야 하나? 4월 10일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노동운동 일각에서도 "일방적" 매각에 반대한다며 전제를 달거나, "바람직한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은 위기에 빠진 민간 기업을 다른 민간 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민영화는 비용 절감과 수

익성 제고가 목표로 설정되기 마련이고,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의 희생을 동반한다. 따라서 대우조선 민영화는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선 매각 철회'를 분명히 하

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4월 9일 금속노조가 주최한 '조선산업 미래 찾기 기자간담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철회된다면, 민간 컨소시엄 매각부터 공기업화까지 다양한 방식의 매각을 모두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너스 합병"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1 더하기 1로 2를 만드는 개혁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망가뜨리는 마이너스 합병"이니 반대해야 하지만, 노조와 사측,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노정협상 등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 방안'을 만드는 데에는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박종식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객원 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시너지는 불분명한데 조선산업 설비나 인력 감축, 기자재 산업 축소 효과는 명확하다"고 비판하면서,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금속노조 등은 중형조선소와 기자재부품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형-중소형-기자재부품사로 이어지는 조선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금속노조 등이 정부·사측에게 조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방안을 반

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산업 발전 방안이나 부품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사측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약점이 있다.

노동조합이 경쟁력 강화 방안에 협력하다 보면, 결국 비용 절감 논리에 취약해져 노동자들도 일자리와 임금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가 쉽다. 특히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어떤 발전 전략이 성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 일은 더욱 빈번히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이번 대우조선 민영화로 위기를 겪는 경남의 대우조선 납품 기자재 부품사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 압박을 받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STX·성동조선 등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에서 봤듯이, 중형조선소나 기자재부품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도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선업 발전 방안을 두고 정부·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대우조선을 영구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돈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은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의 일부다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소위원

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라며 세계 1·2위 조선소의 합병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한국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 만들고, 여기에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쓰는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 기업을 할겁에 넘기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케,

연구 등 중북 부문 노동자들은 고용 위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특수선이나 해양 플랜트 노동자들은 강제 전환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사측은 경쟁력 제고를 운운하며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엔진사업부 등 부품 제조 부문은 대우조선이 거래하던 부품사와 경쟁시켜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자산을 상당히 가져가면서도 부채는 대부분 현대중공업에 떠넘길 예정이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익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측은 현대중공업의 낮은 수익과 높은 부채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지위가 낮아져(비상장회사가 돼) 대출 이자가 오르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볼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거둬들인 구조조정으

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일감이 늘고 잔업과 특근을 하기 시작했다. 선박 생산량이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통해 또 다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 투쟁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정서가 꽤 광범하다. 노조가 실시한 물적분할 반대 서명은 거의 다 하는 분위기다. 평소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던 팀장과 사무직까지 참가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 투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물적분할 시도에 타격을 입힌다면 정부의 대우조선 민영화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의 물적분할 설명회를 저지하겠

다고 밝혔다. 이런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적분할을 대우조선 민영화와 분리된 문제로 여기기도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 인수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발등에 떨어진 물적분할에 맞선 투쟁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된 듯하다. 반면,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맞선 투쟁은 부차적인 과제로 여기는 것이다. 사실상 노조 지도부도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맥락, 즉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협소해지면 정작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물적분할)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어려워진다.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선업 전체를 염두에 두고 온갖 정치적·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텐데, 정작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로 여기면 작업장 안에서 대안을 찾아

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적분할이 대우조선 민영화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우조선 민영화에 맞선 투쟁에도 힘을 쏟아야 물적분할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그러려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도 중요하다. 국가가 추진하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나서서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속에서 서로 연대감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 지부가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와 노동계약 반대를 결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투쟁을 하도록 활동가들이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 |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 파워그라인더(일명 파워공) 하청 노동자 수백 명이 2주간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지난해에는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때먹는 현대중공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김동성 지회장(사진)을 만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과 쟁점을 들었다.



사진 김지현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나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 폐업과 임금 체불이 일어났고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 대략 2만 명 정도가 나갔다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삼성중공업도 1만 5000명 정도가 해고됐습니다.

임금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상여금이 없어졌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불량탕(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은 아예 상여금이 없고,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본공(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만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더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력이 모집되지 않으니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서남지역(전라도권) 조선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당 규모로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업했던 파워공 노동자들의 투쟁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파워공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임금이었습니다. 일당이 20만 원에서 단기간에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힘든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리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퇴직금 적립 폐지도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하청 업체들이 임금에서 퇴직금을 떼서 모았다가 퇴직할 때 주는 데, 문제는 1년 이하로 근무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워공 노동자 수백 명이 가입해 있는 SNS 소통방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일당직인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 경험 때문에 서로 연락하는 소통방입니다. 처음에 몇몇 노동자들이 불만을 말했는데 자발적으로 작업 거부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제안이 순식간에 퍼졌던 거죠. 그렇게 2월 하순 작업 거부를 한 첫날에 400명 정도가 참가한 겁니다.(전체 파워공은 700명 수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하청지회 활동가들도 놀랐죠. 하청 노동자들에게 무슨 조직적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입소문으로 작업을 거부했다는 게

말이죠. 우리는 노동자들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 장소 인근에서 홍보전을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모아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별 대표를 뽑고 조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공장 내부 홍보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이 참가했고, 그 다음에는 200명이 됐고 3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자 업체별로 임금을 올려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파업 후 투쟁에 동참한 노동자가 많았던 업체에서는 사측이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힘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또 다른 투쟁도 할 수 있다는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워공 투쟁 중에 자체적으로 싸운(다른 업종의)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사측 제시안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우리도 집단 거부해 보자”고 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은 인근 업체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이를 동안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금 인상 수준이 높진 않고 원래 올랐어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올린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개 업체에서 자발적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파워공 노동자가 가장 많이 참가한 한 업체에서는 비파워공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쟁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도 한 번 해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파워공 노동자 투쟁과 멀게는 2년 전 하청노조 설립과 투쟁, 식당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영향을 미쳐 이런 변화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파워공 투쟁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방승차를 계속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습니다.



김지현 기자

대우조선 민영화를 비롯한 조선업 구조조정은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강요한다

올해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투쟁을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우조선에 하청 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을 모아서 임금 인상 요구를 공동으로 하자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최근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투쟁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우조선의 협력 업체인 웰리브가 청원경찰(경비) 사업을 포기하면서, 4월 1일 노동자 수십 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대화해 보니, 청원경찰은 노사관계법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고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정리하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 원청이 직접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해야 했던 겁니다. 이번 해고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협력사 고용으로 30년 넘게 일했는데 말이죠.

전원 해고를 앞두고 위기 의식이 커진 노동자들은 하청지회에 가입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상담이 들어온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민영화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추가[인력] 구조조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분간은 일감이 있어서 현장 구조조정이 당장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후 2~3년이 지나 물량을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물량 때문이라도 추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청 노동자들이 느끼



최정호 기자

3월 대우조선 파워그라인더(파워공) 하청 노동자 파업

는 위기감이 낮습니다. 다른 데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에 맞선 원하청 단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와 공동 투쟁해 대규모 조직화를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원하청 노조 공동 요구안으로 공동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된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공동 요구안으로 받았습니다. 노조 할 권리,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그것이지요. 이게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최대 쟁점은 매각인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자기 문제로 여겨질까 하는 겁니다. 이해할 만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활을 걸고 고용 문제로 싸우는데 임금 올려 달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잠정 포기하고 매각 반대 싸움으로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의 결집이 안 될 것입니다.

임금 인상을 내거는 게 민영화 반대

분위기와 맞지 않고 집단이기주의 같고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포기하고 매각 반대 투쟁으로 가면 하청 노동자들의 힘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이자, 동시에 하청노조 조직화를 위한 투쟁이고, 매각 반대를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직이 돼야 매각 반대 싸움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슬로건을 ‘매각 반대 투쟁하자’고 해도 실제로 조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과 매각 반대 투쟁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계획은 하청지회가 정규직 노조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에게 교육 등으로 매각 반대 투쟁을 알리는 것입니다. 흔히 하청 노동자들이 매각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본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노조도 매각 저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며, 원하청 노동자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하면 뭔가를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활동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인터뷰·정희 김지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선박 수주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 임금은 체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작업 거부, 출근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4월 16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참가해 사측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대병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서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꽤 많이 참가해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혁명적 노동자의 목소리 등 정치 단체 활동가들도 여럿 참가했다.

민주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 등이 사측을 규탄하며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한 하청 노동자는 분노를 토했다. “설날에 고향도 못 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50퍼센트, 3월에는 전액을 못 받았습니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입니까? 현대중공업을 위한 정부입니까?”

이러한 하청 노동자 부인의 피맺힌 발언은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소위 썩빠지게 일한다고 합니다. 신랑은 먼지 구멍이에서 일하고 까만 물골로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그런데 왜 임금을 안 줘니까? 작년까지는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어렵네요.”

“좋은 소식이 있을까 계속 휴대폰만 봤습니다. 결국 임금이 안 되더라고요. 카드 값도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신용등급도 낮아졌죠. 누가 책임 질 겁니까? 현대중공업이 책임 질 겁니까?”

“봉급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신랑과 둘이서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도,



4월 16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아무것도 안 된다네요. 결국 저희 서민들은 은행 문턱도 높더라고요. 저희들 신용등급 책임져 주세요.

“해마다 물가 인상 되는 거 아시죠? 택시를 오랜만에 탔는데 택시 요금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왜 현대중공업 노동자 임금은 계속 역주행하는 겁니까? 돈 몇 만 원 들고 알뜰살뜰 살아보겠다고 재래시장 아무리 찾아봤자, 과일 한 바구니 덩석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아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굴리시는 머리 좋은 양반들이 이걸 아시냐고요! 집에 가면 냉장고가 가득 하니 바구니 물가 시세를 모르시겠죠.”

“현대중공업에 일이 있지만, 지금 임금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타지로 나가 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하며, 집을 놔두고 타지에서 원룸을 구해

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희 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아빠 봉급이 몇 달이나 안 나온 줄 아니? 이번 달은 차비도 줄 수 없다.’ 작은 애가 울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런 회사에서 일하냐고 하더군요.”

“밀린 임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낮게 책정돼 있는 임금, 물가 상승 폭에 맞춰서 제대로 책정해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경영을 제발 좀 해주십시오. 요즘 신랑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매일 기죽어서 다닙니다. (기자회견장 어딘가에서 들을 남편에게) ‘당당하게 어깨 펴라. [승리해서] 우리 기분 좋게 봅시다.’”

사람 살리는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조선업 불황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 속에서 하청 노동자 3만 명이 해고됐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이번에 투쟁에 나선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간 임금 인상은커녕 계속 삭감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을 때보다 지금 30퍼센트 가까이 적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선박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일감이 늘기 시작했다. 그간 인력을 줄였으니 이제는 다시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비용 절감 기조를 버리지 않았다. 수주가 늘었지만 수주 잔량 아직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그나마 최고점을 찍었던 2013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업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의 꾸준한 상승도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모험이기 때문에, 사측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죽어 나가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이다. 사측은 비용은 더 적게, 생산은 더 빠르게 하라며 노동자들을 체찍질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일감이 늘었지만 돈이 없다면서 연장근무를 제한하고 평일의 근무 할당량을 늘렸다고 한다. 임금을 압박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사측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감축하고 안전 장비 지급을 줄였다. 노동자들은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측의 비용 절감 속에서 모두 고통 받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 모두 현대중공업 사측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선 투쟁이다. 따라서 정규직 활동가들이 실질적인 연대 건설에 나서야 한다.

사측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체불 임금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식으로 기간잡하고 있는 듯하다.

사측의 고통 전가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당장 일부 노동자들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도 언젠가 사측의 공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함께 싸우는 게 유리하다.

지금 일감이 늘어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이롭다.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김지태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려는 홍익대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래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20여 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홍익대학교 당국은 경비업체 KT텔레캅과 계약하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 초소 10여 곳을 줄일 예정이다.

최근 학내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으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기숙사 여자 휴게실에서는 외부인이 발견됐다.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 학교 당국과 경비업체는 안전 강화와는 반대 방향인 계획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홍익대 누적 적립금은 7565억 원이다(2018년,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돈을 쌓아 놓고도 학교 당국은 경비업체를 외주화하고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왔다. 노동자 해고도 호시탐탐 시도해 왔다. 비용 절감이 이유였다.

올해도 학교와 경비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아끼려고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체계를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했다. 경비업체는 정년 퇴직 등으로 생기는 경비 노동자 결원을 충원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져 왔다.

이에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이하 모닥불)이 올 학기 초에 결성됐다. 모닥불은 3월

26일부터 홍익대 학생들에게 경비 인력 감축으로 생길 학생 안전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기자회견 당일까지 학생 1100여 명이 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박진국 분회장은 이렇게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 “올해 정년 퇴직자가 2명이 생깁니다. 게다가 노동자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인력 충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그러면 동료들이 현장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인경비로만 돌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경비 노동자] 인원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학교 당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정말로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배

려했다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부터 유인경비 기능을 강화하고 경비 인력을 확충했어야 합니다.”(총학생회 박승리 인권연대국장)

“한 미래 학생은 밤에 건물에 남아서 과제할 때 경비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경비업체가 경비 초소를 축소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노동자연대 김지은 회원)

“우리의 목표는 노학연대체 설립을 통해 장기지속적인 노동 문제 개선, 나아가 직접고용을 통한 근본 문제 해소를 꾀하는 것입니다.”(총학생회 유진 핵심전략국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존재 자체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저희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부당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 임

수빈 대표)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소속 서울대 학생들도 참가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벌어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했던 학생들이다. 한 학생은 이런 일이 홍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서울대에서도 완전히 같은 일들[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년 퇴임으로 발생하는 빈 자리를 메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학교 당국에 서명을 전달했다. 홍익대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모닥불 소속 학생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경비 초소 축소와 경비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학생들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자.

김지은

기고 | 한국디아코니아 흥주민 목사

난민 인정은 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이집트 난민들이 17일 동안 법무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들의 권리 보장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필자인 한국디아코니아 흥주민 목사(사진)는 이번 농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난민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6일] 이집트 난민들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17일간 노숙이 종료됐다. 어제 하루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밤늦도록 토론하고 오늘 공무원들과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마감했다. 처음 시작부터 다섯 번 연대하며 차디찬 길거리에서의 지난한 노정에 함께했다.

이들에게 대화의 상대자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늘에서야 형식적인 대화 시간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정리를 했다. 의미있는 정부의 입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과의 연대와 서로 간의 학습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지난해 여름에 밀려 온 예멘 난민에 이어 겨울에 터진 앙골라인 가족 난민을 통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양산된 세계 난민의 지형을 경험했다면, 이집트 난민들과의 이번 만남은 또 다른 세계의 현실을 맛보게 했다. 특히 심각한 정치적 혁명 과정을 통해 양산된 이집트 난민 현실은 개인 이력을 보더라도 가히 충격적이다.

2013년 8월 14일 이집트의 군부 독재자 시시는 2000여 명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는다. 이후 이제껏 정치범은 10만여 명이 투옥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 난민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2018년 9월 이전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거의 난민 지위가 불허돼 3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하며 숨통 조이는 삶이 주어졌다.

숨통 조이는 삶

한국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 체류 연장을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악명 높다. 법무부 산하의 이 기관은 이주민에게는 열라대왕 격이다. 방망이 두드리는 놈이 입자라는 말이 있듯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기세는 등등하다. 수틀리면 국물도 없다. 4월 25일에 결과가 나올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의 재판에서도 봤듯이, 차장 국경수비대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근거 없는 억지는 무소불위다.

자료 공개하려면 그런 관행이 없더니, 규정에 없더니, 법조항을 들먹이며 더는 대꾸를 못하게 한다. 특히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습은 마치 기계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던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다.

● 24세의 A는 1년 전 한국에 왔다. 이



살고자 온 곳에서, 어디까지 내몰려야 하는가 4월 14일 법무부 앞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들과 연대 온 활동가들이 "난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집트에서 그는 엔지니어 관련 전공을 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反)정부운동에 가담해 1년간 감옥에 살다가 다시 형을 받았는데, 150년형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19일 정도 억류됐었고 지금 G-1-5비재난민 신청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다. 무슬림 국가로 가지 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을 항상 받는다. 이걸 너무 큰 상처다. 3개월마다 매번 체류 연장 하러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 27세의 O는 1년 4개월 전 한국에 왔다. 대학에서 고전 아랍어를 전공하고 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다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는 여권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페이크[위조] 여권으로 입국했다. 그는 이집트의 정치적 박해로 떠나야 했다. 국제적 보호를 받고 싶다. 여권도 필요하고 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다른 나라라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더는 도주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쉼터에서 있을 수 있는 기한이 끝났고 지낼 곳도 없다. 이태원 모스크 앞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의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다.

● 22세의 N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단에서 약학대학을 1년 다니다가 반정부 운동에 가담해 두 번 끌려가 석 달간 감옥에 있다가 한국에 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너무 인간 이하 대접을 받는다. 체류 기한 연장 받을 때 적어도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다.

● 34세인 U는 이들 중 가장 연배가 높다. 법학전공자인 그는 변호사로 활동한 엘리트다. 하지만 군사독재의 칼끝은 가정을 뒤흔들었다. 2년간 투옥생활로 부인과 이혼했다. 경찰의 집요한 협박으로 처자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는 17개 죄목으로 130년형을 받아 터는 이집트에서의 삶이 불가능해 망명길에 올랐다. 이집트에서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터키로 갔다. 그런데 터키에서도 이집트 정부가 압력을 넣었는지 또다시 정치적 박해를 받아야 했다. 한국 생활도 너무 힘들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체류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았다.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난민은 우리 이웃이다

17일간 노숙 투쟁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와 배고픔도 털어낼 겸 젊은 이집트 친구를 다섯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충격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가족을 등지고 나온 예멘과 앙골라 친구들과는 또 다른 결의 이집트 정치 난민의 현실은 가히 놀라웠다. 광주 학살이나 세월호 참극에 비견되는 대형 참사를 겪고 혁명 운동의 대열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이집트의 아들들은 눈빛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이런 비참함을 가슴에 묻고 온 이들에게 한국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난민 인정은 커녕 냉대와 홀대 그

리고 무시까지 서슴없이 자행한다. 혁명 운동에 가담한 이들의 자존심이 대단하다. 굴복하느니 서서 죽기 원한다는 운동가요를 부단히 불렀던 우리들의 1980년대처럼 이집트의 아들들에게 불과 6년 전 혁명의 바람이 불어와 영혼에 깊이 박혀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 석 달마다 출입국 공무원들의 강압적이고 비하하는 태도는 눈곱 사나웠을 것이다.

4월 15일 M의 출입국사무소에서 해프닝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폭발돼 나온 예견된 사건이었다. 난민 불인정 통보서를 불과 4일 전에 쥐고 찾아간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였다. 26세의 나이에 감옥에 3번씩이나 간 별 세 개 정치범이다. 그리고 12년형을 받고 탈출해 온 곳이 민주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존중한다는 한국이었다.

그런 이력이 있는 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구한 것은 난민 심사 영상이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다.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법이 장착돼 있는 나라에서 자신같은 정치범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심사 증명을 법정에서 하고자 했다. 하지만 출입국 공무원이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한 것이다.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됨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난민 심사는 이미 결론을 내고(난민 안주기로)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는 생각이 짙어간다. 예멘 난민 신청자 500여 명 중 겨우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심사 대상에도 불허부대 109일 동안 출입국장에 구금돼 있다. 그런 나라다.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 우수한 나라다. 턱없는 우월감이

대단한 나라다.

차디찬 풍찬노숙을 17일간 한 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하면서 헤어졌다. 앞으로 이들의 친구가 돼 이들을 알아가고 싶다. 한국에서의 난민이라는 주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더욱 정교하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학습돼야 한다. 난민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다.

※ 농성 난민들 이력에 '난민과 손잡고' 김어진 대표가 전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사진과 영상은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withrefugeesjointaction]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알제리·수단의 반정부 운동 — 배경과 전망
- ★ 맑은 공기 앓아가는 죽음의 자본주의
- ★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강제추방은 살인이다
- ★ 과로로 쓰러지는 집배원들 — 정규 인력 증원하라
- ★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실 계획은 재벌만 좋은 일
- ★ 영화 '바이스' 전쟁광 딕 체니 다룬 블랙코미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

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에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우파와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뒤집고 재추진한 것을 취소시켜 한번 더 승리한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방조 속에서도 승리했으므로 온전한 운동의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에 합부로 손대는 정치인은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는 게 입증된 것이기도 하고요.

원희룡 도지사도 어느정도 반대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주도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얘기가 먹힐 것이라고 여겼던 듯해요. 제주도 민들과 반대 운동을 우습게 본 거죠.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어기고 강행하자 반대 여론이 치솟고 반대 운동도 만만치 않게 벌어졌어요. 제주도에서는 공론 조사 결과를 어긴 것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올해 설에 76퍼센트나 났어요. [도지사] 소환운동 찬성 여론도 46퍼센트나 났어요.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소환운동도 준비되고 있었어요. 영리병원 반대 운동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제2공항 반대 운동에도 힘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제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운동들의 중심점 구실을 하게 될까 봐 상당히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반대 운동은 결국 [중국] 녹지병원의 국내 파트너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청문 과정에서 녹지 그룹이 밝혔듯이 말이죠. 국내 파트너는 더 멀어붙었다가는 여론의 못매를 맞겠다 싶었을 거예요. 결국 운영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허가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겁니다.

요컨대 이런 운동들이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의 거취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결정이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의료관광 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국제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중 어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투쟁의 초기부터 주력 부대로 나섰다

하나도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진 것 아닌가요? 한·중 관계가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건 당연한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틀렸고 무능했음을 자기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지사로는 완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 거죠. 퇴진 운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겁니다. 일단 행정소송이 하나 걸려 있어요. 녹지 그룹 측이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 놔서요. 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는

또다른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요.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민사소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분쟁조정(ISDS)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녹지 측이 국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여요. 녹지 그룹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자체에 외국인, 그중에서도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니까요.

또, 소송이 계속되면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계획서 자체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겁

니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녹지 측이 스스로 털어놓았듯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는 문제도 여전하고요. 우회 투자 의혹도 커요.

법원도 현재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 사법부에 대한 여론을 고려했을 때 영리병원 허가 판결을 내리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연쇄살인범은 잡히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녹지그룹 측에 그나마 가장 유리한 소송은 한중FTA상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ISDS)인데요. 지금 녹지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문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정부 대리인을 맡고 있어요.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태평양이 말았다는 건 실제 ISDS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녹지그룹 측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것은 웃기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건데, 녹지가 번 돈은 세계 혜택만 해도 수백억 원이예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일부 손실은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소송 대상자가 돼요. 따라서 중앙정부가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해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데 행정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해요. 손해배상소송을 해도 JDC가 당사자가 될 거고요. 애당초 영리병원은 JDC가 하자고 한 거니까요. 녹지 측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해 놓고도 사업을 취소한 것을 계속 문제삼을 거예요.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최근 추진되는 여러 규제 완화에 맞선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인보사[코오롱생명과학의 연골 치료제] 사태는 지금 추진되는 규제 완화 법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여 줍니다. 약 같지도 않은 약을 정부가 허가해주고 실제 환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제조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식약처가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예요. 그런데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할 뻔했어요. 인보사 문제 때문에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죠.

또, 제가 다른 글에서 ‘연쇄살인범은 잡히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하고 쓴 적이 있는데요.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큼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한마디씩 얘기했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근거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당정청 협의에서도 녹지국제병원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이건 민주당이 말만 할 뿐 영리병원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해 8월 경총이 정부에 규제완화건의사항 9개를 전달했는데 그중 첫째가 영리병원, 둘째가 원격의료 허용이었어요. 최근 정보통신부장관은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영리병원과 의료 영리화는 자본의 관심사 중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병원, 보험사, 통신사 등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 놓은 자본들도 있죠. 그러니 또 시간을 끌다가 1~2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원희룡이 도지사할 때는 좀 어렵겠지만요.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는 지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의미있는 일이고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를 찾아 4·3항쟁 트라우마 센터를 언급했는데 녹지병원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죠.

어쨌든 국민의 생명만은 철저히 지켜줬으면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을 어기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만큼은 박근혜와는 달라야 한다고 뽑아 준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 완화·의료 영리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규탄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호중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막시즘2019

8월 22일(목)~25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www.marxism.or.kr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